

전남도, 산하기관 ‘허술한 운영’ 손 본다

경영평가 하위 등급 기관 운영비 감액 ‘페널티’…최고 등급엔 포상금
경영 공시 미이행·업무 성과 미흡…행정통합 대비 전면적 개편 지적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등이 경영 공시도 제대로 안 하고 업무 성과도 미흡한데다, 기관 간 중복되는 업무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 산하기관은 지난 2023년 기관 수를 25개에서 22개로 줄이는 ‘체질개선’을 한 바 있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남은 22개 기관들의 존속 여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한 경영 공시=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영균(민주·순천1) 도의원은 이날 제 396회 임시회 기간 열린 전남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기관들은 경영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은 경영평가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 사회서비스원은 2025년 경영공시 누락이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2022년도 자료부터 공시가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흡한 업무 성과도=업무 성과가 미흡한 산하기관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재단법인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는 지난해 전남도 17개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 등급을 받았다.

재단은 특히 지난해 행사에서 고질적인 교통,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국제’ 박람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지난해 어가에 양식 기술을 이전을 하거나 지역 사정에 맞는 종자 개발 성과도 미흡한 상태다. 앞서,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단 한 건의 국가 공모형 연구개발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질타를 받았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의 경우 오랜 연구 끝에 농민들에게 보급한 키워 ‘해금’ 품종에 대한 디자인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安い한 행정 처리로 민간 영농 법인에게 넘어가도록 방치한 게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최근 ‘2026년 1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재단을 비롯해 평가 등급 ‘라·마’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운영비를 감액시키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농업박람회재단의 경우 ‘정원가산업부비’의 20%까지 감액될 수 있는 식이다.

◇업무 중복 고려한 통·폐합 필요도=전남테크노파크와 녹색에너지연구원, 두 기관의 경우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최근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고사리 손으로
입춘대길 써요

절기상 입춘을 이틀 앞둔 2일 광주시 북구 민원실에서 열린 입춘대길 휘호 제작 무료배행사에서 노인복지센터 사제 동아리반 회원들이 중흥하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입춘방쓰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업무보고를 보면, 연구원은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 운영, 재생에너지 공영화 사업 등을 언급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역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 구축과 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당장, 두 기관은 에너지 자립마을, 중앙아시아 에너지 신흥시장 개척 등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업무 중복 논란이 나올만하다. 이에따라 전남도가 지난 2023년 ‘전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도 출자·출연 공공기관들을 대

상으로 각 기관별 일자리·에너지·환경 분야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할 점을 계기로 광주·전남 통합 이후 기관별 몸집 줄이기와 인력 재배치 등 공공기관 개혁 행보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레미콘 가격 담합 광양 7개 업체 무더기 적발

2년간 3차례 납품 단가 올리고
건설사 압박해 부당이득 챙겨
공정위, 과징금 22억원 부과

전남지역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담합하고 건설사를 압박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모든 업체들이 지역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며 ‘담합 구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민간공사용 판매가 짜짜미를 적발해 함께 22억 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담합에는 광양 레미콘 시장 점유율 합계 100%인 9개 업체가 가담했으나, 2개 업체는 폐업해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시로 이뤄진 영업 담당 임직원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 판매단가를 기준 가격보다 75% 또

는 86% 등 특정 수준의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합의한 뒤 세 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업체들은 통상 기준 가격에 거래 건별로 서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사건 업체들은 할인율까지 사전에 합의하면서 서로 동일한 기준 단가표를 사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가격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던 1㎥당 레미콘 가격이 2021년 6월 인상 이후 7만 2400원으로 단일화됐고 2022년 4월에는 8만 6100원, 2023년 1월에는 9만 1200원으로 연속 상승했다.

이들 업체는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했고 건설사들은 7개 사가 제시한 가격에 레미콘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특정 업체가 가격을 낮춰 영업에 나설 경우 다른 업체들이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 업체 인근 지역의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 A씨는 “우리 지역 기준 정상 단가로 계약했을 뿐

인데도 광양 업체들이 ‘덤핑’(다른 물건보다 일부러 싸게 팔아 시장을 점유하려 하는 행위) 영업이라며 항의해 왔다”며 “현장에 납품하려 하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우리 업체가 포함된 발주에 납품을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영업 방해와 ‘갑질’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설업체에 오래 몸담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 시장을 묶어 놓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며 “이번 공정위 제재는 늦었지만 필요했던 조치”라고 강조했다.

7개 업체는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 공급’ 등 물량 배분 원칙에도 합의했으며 사전에 정한 물량을 초과한 업체에는 신규·추가 납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의의를 통해 제재를 결정했다.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동양레미콘, 케이더블유, 고려레미콘, 광원레미콘, 중원산업, 서흥산업, 전곡산업이며 업체별 과징금은 2억 6800만~4억 3200만원 수준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대법, ‘전두환 회고록’ 손배소 12일 선고

전두환씨 일가가 ‘전두환 회고록’ 출판을 금지하고 5·18민주화운동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과 관련, 오는 12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해당 재판의 쟁점이 되는 회고록 내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 부정론’,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설’ 등 왜곡·변해 주장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재판을 연다.

지난 2022년 10월 19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년 4개월만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냈다.

5·18재단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역사적 책임을 묻고자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회고록에서 전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정론’, ‘자위권 발동에 따른 발포설’ 등을 주장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모두 회고록 내용이 객관

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씨의 소송 승계인인 부인 이순자씨와 출판자인 전재국씨에게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신부에게는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 중 5·18을 왜곡하는 51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이 재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5·18 진상에 대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이번 민사 재판은 전씨 사망으로 공소각각된 형사 재판 증거들을 전부 승계받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북한군 개입설을 비롯한 수많은 진상규명 쟁점들을 결론지를 재판”이라며 “민주주의와 역사 정의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4년 가까이 자제된 것은 아쉽지만,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는 전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전원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 (1차)

에스티엠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6년 02월 02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당사의 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이하 “당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절차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에스티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805호
(연주동, 두산(현대캐피탈))
청산인 일 동 직

74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光州日報

• 전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광 산 571-7658 • 오 치 266-7801
• 용 봉 433-1503 • 우 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8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북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풍 명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